

'87년 이후 20년: 개방적인 시장경제에서의 노동운동

최영기*

'87년 이후 20년간 노동운동은 박정희 개발모델의 해체와 개방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동하는 주요한 사회세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87년 이후 노동운동은 한국정치경제의 능동적 주체였으며 역동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정치 주체였다. 노동운동은 박정희 개발모델의 최대 피해자였고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의지와 그 열만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운동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분배개선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바로 이 점이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갖고 있던 진보성과 역동성의 근원이다.

그렇지만 노동운동은 새로운 정치경제모델의 설계자는 될 수 없었다. '97년 IMF체제 이전까지의 여러 타협 시도가 있었지만 근원적인 화해와 타협 그리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운동은 개발모델의 해체를 원했지만 그 이후 전개된 IMF 주도의 시장개혁은 노동운동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내걸고,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과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제도화되긴 했지만 거침없이 질주하는 재무형 구조조정이나 시장의 힘을 제어하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다.

'97년 이후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과 법치(the rule of law) 앞에서 노동운동의 요구조건과 투쟁방식은 힘을 잃어갔다. 그리고 수익률을 좇아 공장이전과 글로벌소싱, M&A가 빈발하는 경쟁환경에서 조직노동의 경제적 요구와 고용안정 요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오히려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형식으로 노동계층이 분화됨에 따라 기본적인 연대의 틀조차 허물어져 갔다. 또한 일련의 노동법 개정으로 법의 정당성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노사관계의 법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고 '87년 이래의 대중투쟁방식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노동조합·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하락하고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할 말은 더욱 많아지고 고용위기는 심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들은 시장경제의 단기적 효율극대화 경향이나 끝없는 유연화를 두려워한다. 시

*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

장경제의 효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일자리(decent job)와 제도적 차별이 없는 공평사회를 원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개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의 정착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87년 패러다임이 아니라 제도적 참여와 정치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운동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다. 노동·사회정책 기구에 대한 제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임금·직무체계 개편과 숙련향상체계의 개편 등 그동안 임·단협에 간혀 있던 노동운동 지평을 사회정책 영역과 숙련투자 문제로까지 확장시켜야 가능하다. 그리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에서 작동될 수 있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고용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KLI**